

보도 일시	2022. 3. 7.(월) 12:00		
담당 부서	디지털정부국	책임자	과 장 고광덕 (044-205-2761)
	지역디지털서비스과	담당자	주무관 노창오 (044-205-2771)

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인공지능 기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구축 - 행안부, 올해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5개에 38억 원 지원 -

-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구축, 재난상황 공유·관리 플랫폼 운영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이 시행된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는 올해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5개를 선정하고 총 3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- 올해 선정된 5개의 사업은 ▲서울 도봉구의 미세먼지 사물인터넷(IoT) 측정 및 인공지능 기반 대응시스템, ▲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스마트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, ▲대전 소방본부의 실시간 재난 응급상황 공유 플랫폼, ▲서울 성동구·경남 김해시의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등이다.
- 행안부는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하였으며, 3월 2일 사업검토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.
- 먼저, 서울시 도봉구는 ‘인공지능 기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’을 구축하여, 미세먼지 농도 측정 정확도를 높이고 미세먼지 정보를 분석·활용한다.
- 도봉구는 관내에 100여 개의 사물인터넷(IoT)기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, 수집한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광판 등 대민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.
- 또한, 새롭게 구축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로청소차량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청소차 운행경로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.

- 국립공원공단은 첨단정보기술을 적용한 ‘재난상황 공유·관리 플랫폼’을 구축하여 전국 22개의 국립공원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구조 등에 적극 활용한다.
 - 국립공원 재난상황 공유·관리 플랫폼은 각각의 국립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11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단일 업무를 통합한 시스템이다.
 - 시설물 위치 및 관측정보 등의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3디(D) 지리정보체계(GIS) 기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, 보안카메라(CCTV) 영상 이미지 분석, 드론영상 관제 등 재난상황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인지와 인명구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.

- 서울시 성동구와 경상남도 김해시의 ‘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’는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.
 - 종이 서식이 아닌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서식을 작성하고,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민원서식 항목을 자동으로 채우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-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재난상황 발생 시 민·관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협력 및 지능형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‘개방형 응급상황 공유플랫폼’을 구축한다.
 - 재난 시 상황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분석·대응서비스를 구축하고, 음성인식을 통해서 신고자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, 관련 시설 및 대응방법 등 연관정보를 분석·제공하여 재난 의사결정을 돕는다.
 - 또한, 번역기능을 추가하여 외국인 신고에 대한 실시간 통·번역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.

- 행안부와 사업주관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5월 말까지 5개 주관 기관과 함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.

- 특히,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해왔던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과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시범사업에서 사업 효과성이 검증되고 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.

- 고광덕 지역디지털서비스 과장은 “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원·행정 분야의 편의성을 높이고, 재난·안전 분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